

문화운동 국민동참 '긍정 평가'

'97 문화유산의 해 '폐막'

'97 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이 8일 오후 2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에서 조촐하게 거행됐다.

지난 1월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를 주제로 내걸고 출범한 조직위가 그동안 벌여온 사업은 모두 84건. 경제불황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문화유산 '알기 찾기 가꾸기' 사업들이 문예진흥기금 10억원 등을 들여 마무리됐다.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정신을 길러주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마련한 알기 찾기 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알기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재전문가와 함께 하는 답사 △주제별 문화유산 답사안내 책자 및 △문화유적지도 발간보급 등과 '찾기사업'으로 시행한 △전통문화재현행 △문화유산 소재 디자인 전람회 등은 큰 호응을 얻었다.

조직위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도 1천여건이 넘는 자체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조직위의 후원을 받아 본사가 매달 실시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총 1천5백여명이 참가, '우리문화유산 알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문화재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출범당시 조직위는 일과성 행사보다는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며 문화재보호법 개정, 고도보존법 제정, 문화재관리국 '청' 승격 및 문화재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대선정국에 밀려 파행운영된 정기국회에서 내년으로 넘어갔고, 고도보존법 제정도 경주시와의 의견조율이 안돼 불투명한 상태다. 문화재관리국의 '청' 승격과 동반될

테마여행등 '알기 찾기 가꾸기' 활기 문화재보호법 개정등 제도 정비 미약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전문제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관의 육성방안도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과 조직위가 한국고고학회에 의뢰한 '매장문화재발굴 응용 대가의 기준'이 시간이나마 마련된 것이 다행이다.

한병삼 집행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감축대상으로 오르는 것이 문화분야"라며 "내년으로 미뤄진 법과 제도 정비가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유산의 해를 무색케 할 정도로 संब도난사건이 많았던 것도 아쉬움으로



조직위는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돼 가고 있는 경주 등 고도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노력 등 문화재 보존관리 토대 마련에 주력했으나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11월 고도보존법(안) 작성을 위한 토론회 모습.

한나라당 선거홍보물의 '탈'이 탈을 붙였다. "거짓말, 속임수, 경신불복... 믿지 못할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이 말의 상징으로 내세운 '파계승 탈'이 불교계를 자극했다. 왜, 하필이면 '파계승 탈'을 등장시켰을까.

한나라당과 제작진의 사과·해명대로 고의는 아니었으리라. 한표가 새 로울 이 마당에 지지율을 올리려고 만든 홍보물을 통해 불교계를 모독할 리 없다고 본다. 불교계가 '파계승 탈'에 대해 항의하고 분노하는 이 유행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교계를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거짓, 속임수의 상징으로 '파계승의 탈'을 떠올린 그 실수가 문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탈춤에는 오래 파계승 종자마당이 펼쳐진다. 한나라당이 거짓의 상징물로 삼은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파계승은 부네(기녀 혹은 소실)를 연구리에 차고 도망간다. 봉산탈춤에서는 생불로 칭송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되어 파계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탈춤의 5과장 사자춤에서도 파계승들을 벌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와

'목중'을 위협한다. 이처럼 파계승 중자를 통해 승려를 비하하고 있는 전통탈춤의 배경에는 조선조의 억불 500년이라는 역사의 수난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아픔이다.

억불과 배불이 만든 불교비하의 문화가 그대로 흘러내려 거짓의 상징으로 '파계승 탈'을 떠올릴 정도라면 '탈' 사건은 전통문화 차원에서 이해될 일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역사와 문화를 바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점을 이해해야만 불교계의 분노를 수긍할 수 있다.

그 래야만 한나라당의 사과와 바른 역사 문화 종교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교계도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대사에서 불거진 '파계승 탈' 사건을 밖으로만 댈 일이 아니다. 500년된 상처 치유의 계기로 삼을 때 '분노'는 제압을 지닐 수 있다. 고려시대 하회의 승려탈은 색상이 밝고 호방하게 웃는 상이며 조선조 탈은 어둡고 찌든 울상이다. 오늘의 승려상을 '탈'로 묘사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불교계는 자화상을 그려보지 하



조계종 예비승 호칭 '사미(니)' 확정

법복 동정·소매끝에 밤색 "위계질서·관리체계 확립"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예비승들은 내년 3월부터 '00사미' '00사미니'로 불리게 된다. 또 이들 예비승들에게는 승려증대신 사미(니)증이 발급되며, 법복 동정과 소매끝에 가사색(밤색)을 부착해야 한다.

조계종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무관)는 5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당초 고려했던 '수지'나 '선재' 대신 '사미(니)'로 호칭을 확정했다. 계단위원회에서 융통에도 없는 호칭을 쓸 수 없다는 주장과 사미(니)쪽을 선호하는 스님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사미(니)의 현황과 이동질서를 파악하는 데도 용이해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확립에도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교육기관 상급반 학인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고, 또 호칭이 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강원 및 사찰들과 협조해 스님뿐 아니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미(니)증은 2차 회의에서 결정됐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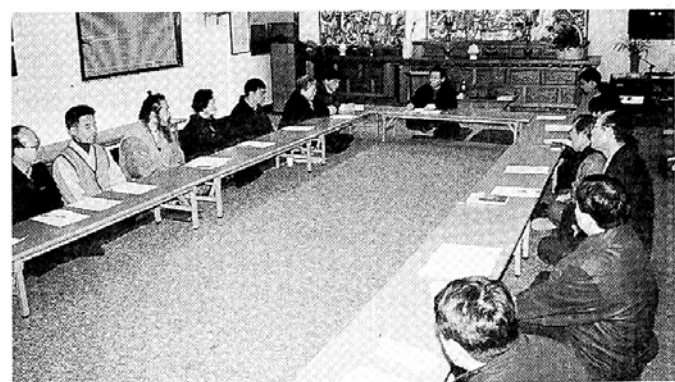
확정이 대외적 공신력과 전체 사미(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3차 회의에서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의 강제성과 관리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다.

추진위는 사미(니)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마다 갱신토록 했으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 예비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사미(니)계를 수지한 이후 2년 이내에 종단 기초교육기관에 입교해야 하며, 4년간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종단이 인정하는 사미(니)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사미(니)들이 소지하고 있는 승려증은 내년 초 일제히 사미(니)증으로 대체된다.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모든 사미(니)는 동정과 소매끝에 가사색을 두른 법복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장삼은 동정에만 가사색을 두르도록 했다. 그러나 의제는 시행령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홍보포스터를 제작, 전국 각 사찰에 배포한 후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총무원장 윌주스님과 교육원장 암도스님은 이와 관련 내년 1월 초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행의지를 천명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5일 열린 청소년 분야 포교사 간담회. 포교사들은 종단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포교사 전문화" 의견 일치

조계종포교원 포교사 간담회 '성과'

포교원이 5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활동분야별 포교사 간담회는 이후 포교사 전문화와 유명무실한 포교사단의 재정비를 위한 다짐들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포교대상자의 언어와 몸짓의 이해없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교사 전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교사단 임동현 사무국장은 "포교사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

정책을 정했으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포교원에서 포교사단 사무국장을 임명하여 포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포교원에 대한 상토도 쏟아졌다. 매출만졌지 포교활동에 지원은 없었다는 항의였다. 포교단을 운영하는 것을 불허한 종법을 현실적이라며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포교원 담당자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포교단 개선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스님들과 재가자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승가의 반응을 알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불거질 경우 이후 포교사 전문화 및 포교사단 정비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포교사 자격증을 만드는 등 여러 종단의 체계를 혼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포교원은 분야별 간담회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소식지를 발간,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포교활동 성과와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2월경 세미나를 열어 포교사의 지위를 비롯 역할 등을 구체

종단배출 포교인력 조직적 역할 미흡

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포교의지 또한 매우 높았다"며 "찾가지 제도 보완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가시적인 포교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포교사들은 몇몇 개인의 원력에 의한 포교활동에 그칠 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포교원은 물론 포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계종단이 배출한 우수한 포교인력임에도 활동면에서는 개인적인 원력과 활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을 뿐 방지상태나 다름없었다.

9일 열렸던 군·교도소 등 특수분야 활동 포교사들도 "1사찰 1군(교도소)법당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포교사회를 만들자"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포교원은 이와 관련, 포교사단내에 포교분야별 분과위 구성 또는 지역별 분야별 분과위를 구성해 운영케 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구성에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은 하되 운영은 자율과 포교원의 통제력을 조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포교사들의 종단불신도 여전했다. '1사찰 1군법당 지원제도'의 경우 20여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종단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다. 다섯 차례의 간담회 참석인원이 평균 20~30명에 머문 것도 종단불신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다. 포교원은

분야별 분과위 자율운영 모색

적으로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제도 보완의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포교사교육의 분야별 개회, 포교사증 갱신 및 신규발행시 전문분야를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화된 포교사의 활동사례 발굴도 주요한 관심사다.

또 본말사 포교규정을 제정, 종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문화된 포교사의 의무규정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지인사 시 포교성과를 반드시 평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승보(僧寶)의 존엄성과 불교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불교를 폄하, 비방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천만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경신 불복... 믿지 못할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2천만 불자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부처님 전에 진정으로 침회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1994년 3·29, 4·10법안, 청와대 예배 사건, 점검고시 평일실시, 17사단 훼손사건, 신학대학원 설립, 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 등 우리는 특정종교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종교사회로서의 기본적 헌법질서조차도 망각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불교모독 법정홍보물은 승보의 존엄과 2천만 불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또 하나의 법안입니다.

그 술한 종교편향정책과 종교적 박해를 받아왔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급기야 이번에는 수천만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우송되는 선거 법정 홍보물을 통해 승보의 권위를 유린하고 1600년 역사의 한국불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불교를 온갖 불신의 상징으로, 또 특정종교를 마치 희망의 화신으로 상징한 이번 한나라당 법정홍보물 사건은 또 하나의 법안에 다름 아닙니다.

한나라당에게 다시금 촉구합니다.

● 불교를 원색적으로 폄하, 비방한 법정홍보물 사건에 대해서 전체 중앙일간지와 방송, 불교계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 조순 총재의 조계사 방문, 한국일보 사과문 등 금번 사태해결을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은 미온적인 해결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안에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2천만 불자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회창 후보가 종교적 편견보다는 종교간의 화합과 공존번영을 위한 후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그러기 위해서 이 후보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94년 3.29, 4.10법안 당시 국무총리직에 있었던 것과, 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를 주장했던 것 등에 관해서도 전 불자들에게 진정한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불교의 자존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 이제 더 이상 요구만 하여서는 안됩니다. 승보의 권위와 불교의 자존은 우리 스스로 적극 나설 때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시는 이러한 치욕의 법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에 엄중 항의 하도록 합시다.

(항의전화 : 02-720-2000)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불교모독규탄 비상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당, 태고종 보현도당, 조국동일불교인협회, 전국전통강원연회(통도사 승가대학 / 해인사 승가대학 / 송광사 승가대학 / 수덕사 승가대학 / 백암사 승가대학 / 불국사 승가대학 / 직지사 승가대학), 동국대 석림회,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 화엄학원, 전국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사 청년회, 보원회, 청년여래회, 대가사 천지말 앙신주경회, 대한일교청년회, 제주종교청년회, 진주불교청년단체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통신대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불교운동연합.